



2016년, 올해를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노동자계급 운동의 원년으로

▶ 관련 기사 3면

제국주의 체제의 모순과
중동 전쟁

6~9면

한일 '위안부' 협상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의
제물이 된 '위안부' 할머니들

2~3면

'위안부'는 누구이며,
어떻게 일본과 한국 국가에 의해
버림받았나?

4~5면

국내 거주 시리아인 압둘 와합: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10면

취업규칙 변경 지침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지침

12면

누구의 낚알까요?

“텍사스에서 만든 진짜 총알. 지역 중소기업 사업가들을 지원하자.”

공화당 트럼프 대변인 피어슨이 총알로 만든
목걸이를 하고 방송에 출연한 이유.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들보다
총기 회사 사업가가 우선

“5만 5천 명 이상”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발표한
시리아 내전으로 2015년에 숨진 인명수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사망자 3분의
1은 민간인”

시리아인권관측소(SOHR)의 발표

“연휴 기간 중에 이런 여러 가지 진전
이 급하게 이뤄지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다.”

외교부 제1차관 임성남.
‘위안부’ 피해 할머니보다 휴일이 중요한 모양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올바른
용단을 내린 것에 대해 역사가 높게 평
가할 것”

“우려한다”를 입에 달고 살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헛소리도 역사가 평가할 것

“외교적 결례에 불과한 소녀상”

KBS 이사 조우석의 막말

“국회는 국민 위 군림 말고 국민 뜻 따
라야”

솔선수범은 할 줄 모르는 박근혜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군 위
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
을 다해 왔다.”

누구를 위한 온 힘을? 박근혜의 자화자찬

“정신을 집중해서 화살을 쏘면 바위도
뚫을 수 있다.”

뚫을 수 있다는 전 우주적 기운이 물려오는
박근혜

“저는 누구보다도 명예와 자존심을 가
지고 공명정대하게 일해 왔다고 자부
한다.”

“누구보다 당당했기 때문에 [증인] 선
서를 거부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형의를 받았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

“이름이 예뻐서 전화해 봤다.”

알바노조 조합원에게 민중총궐기
참석 여부를 물은 경찰의 황당 이유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정치 할 것
입니다.”

‘박근혜 닮아서 정치도 똑같이 할 것 같다’는
댓글에 대한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답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서평 《정치경제학 입문》
로자 룩셈부르크에게 배우는
마르크스 경제학

★ 정부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비판



2015년 12월 30일 수요시위에 참석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한일 ‘위안부’ 합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돕고자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치다

김영익

이 기사는 1월 1일에 발표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자, 가장 크게 기뻐한 국가는 미국이었다. 합의 직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는 합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로써]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진전을 비롯해 폭넓은 지역 및 세계적 문제들에 대한 협력이 심화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번 합의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만큼이나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말마저 나왔다.

미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의 타결을 위해 외교력을 동원했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위안부’ 합의를 위해 자신들이 “건설적 구실”을 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윤병세도 협상 과정에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동안 미국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정부한테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과 타협하라고 집요하게 촉구해 왔다. 한·미·일 동맹을 구축·강화하는 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이 돼 왔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과거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야 했다. 2015년 2월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 웬디 셔먼은 한 연설에서 한국 지도자들이 과거사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의 적을 악당으로 만들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 오바마도 여러 차례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기뻐하는 미국

미국이 이토록 ‘위안부’ 문제를 덮어 버리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한 것은 지속적으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간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2000년대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고 2008년 경제 위기까지 오면서, 미국의 세계 패권은 크게 상처를 입었다. 이 와중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 등지에서 노골적으로 대립하는 한편, 상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책략도 치열하게 동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할 동맹 구조를 견고히 구축하려고 애써 왔다. 일본 총리 아베도 이에 화답해 대중국 견제의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특히, 최근 중동과 유럽의 상황 때문에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이 ‘안보적 기여’를 훨씬 더 많이 해 주기를 강조해야 할 처지다.

미국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면 유럽·동아시아·중동 모두에서 헤게모니를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혼자 힘으로 세 지역에서 제기되는 도전에 모두 대응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 상당한 역량을 투입한 와중에 중동 상황은 크게 악화했고 러시아는 전보다 더 많은 운신의 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제 미국은 자신의 중동 개입이 낳은 괴물인 ‘이라크·시리아 이슬람 국가’(아이시스)에 이어, 러시아의 시

리아 개입 문제도 다뤄야 한다.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약해지면서 중동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중동 정세는 더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힘을 동아시아 한 곳에만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로서 일본을 중심으로 대중국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더 사활적일 게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을 가장 확실히 나눠 질 수 있는 국가는 세계 3위의 경제력을 보유한 일본이다. 미국은 한국도 이 다자동맹 구조의 ‘하위 파트너’로서 전략적 구실을 맡고 군비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부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번 ‘위안부’ 합의의 다음 수순은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가 될 것이다.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는 “[‘위안부’ 합의에 의해] 일·한·미·한국의 안보 협력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의 군 당국 간 실무협회의가 비밀리에 여러 차례 열렸다는 사실이 최근에 폭로됐다. 미국은 3월 핵안보 정상회의의 때 다시 한 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 협력 문제에서 좀 더 확실한 진전을 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한일 ‘위안부’ 협상에서 미국의 개입과 압력을 의식했다. 즉, 박근혜는 오늘날의 친제국주의 정책을 위해 과거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된 사람들을 또다시 희생시켰다.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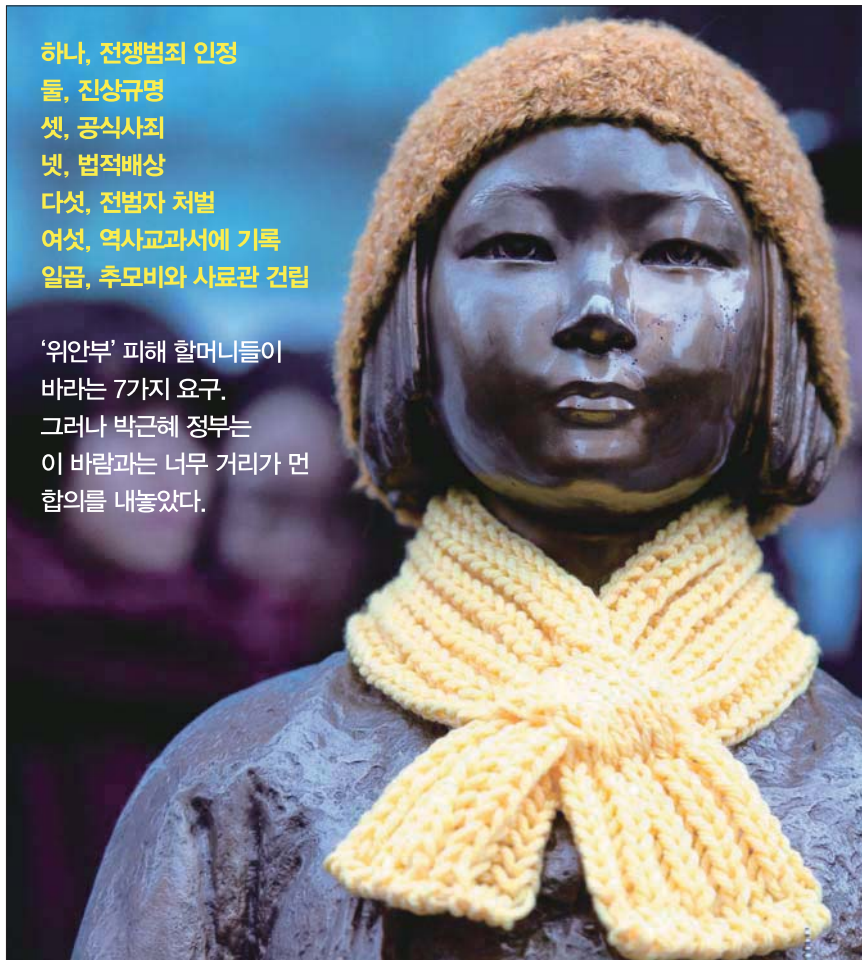
그래서 ‘박근혜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매국 행위를 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번 ‘굴욕’ 협상의 본질이 “매국 대 애국”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박

근혜는 ‘위안부’ 문제에서 매우 부당하고 기만적인 타협을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다른 한편으로 한국 자본주의의 이해관계와도 매우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한국의 역대 지배자들은 모두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일본 지배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한국이 일본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켜 온 데다가 미국과의 군사 동맹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안보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다. 그래서 한국 역대 정부들의 “한일 관계 [정책은] 언제나 국내용과 대외용이 따로 존재했다.”(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고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깊어진 오늘날에도 이 관계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한국 지배자들은 전보다 훨씬 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게 됐지만, 미국의 동맹으로서 경제적·군사적 이득을 얻고 한국 국가의 국제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기본 전략까지 바꾸지는 않았다.(물론 중국과의 관계 악화 없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지만 말이다.) 한국 지배자들이 보기에 중국은 당분간 미국의 세계적 지위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고,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의 안전 보장 구실을 대신 해 줄 리 없다. 그리고 한국 지배자들 사이에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강화해 안전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도 많다.

안보 문제나 한국 국가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을 위해 한미 동맹을 중시할 수록 한국 지배자들은 한·미·일 동



조미자 작가

하나, 전쟁범죄 인정
둘, 진상규명
셋, 공식사죄
넷, 법적배상
다섯, 전범자 처벌
여섯, 역사교과서에 기록
일곱, 추모비와 사료관 건립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바라는 7가지 요구.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 바람과는 너무 거리가 먼
합의를 내놓았다.

맹의 구조에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다.

박근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관계도 의식했을 것이다. 여전히 한국은 수출 상품에 필요한 많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 오는 전체 외국인 투자 가운데 일본의 투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사례도 많다. “에너지와 인프라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협력사업을 펼치고 있는 게 10건이 넘는다.”(〈한국경제〉사설)

그래서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 전경련은 성명을 내어, 양국의 경제 협력이 증진할 것이라며 반겼다. TPP 참여 협상도 더 원활히 진행되고, 중단된 한일 통화교환협정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 미국 같은 제국주의적 국가들에 편승해 지위 상승을 추구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한국인들이 수치스럽다고 여기는 ‘위안부’ 합의를 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기만했고, 이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모두가 다 만족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일축해 버린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태도에는, 자신의 경제적·안보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위안부’ 피해자 같은 천대받는 사람들은 언제든 내칠 수 있다는 한국 지배계급의 냉혹한 논리가 깔려 있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이처럼 한국 지배계급의 이해관계가 미국·일본 지배계급들과 얹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같은 정부들도 다른 우파 정부들처럼 한일 관계에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입장을 표

방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은 이번 ‘위안부’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보좌한 노무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12월 31일 청와대가 ‘역대 정부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다분히 문재인과 민주당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노무현은 “내 임기 동안 정부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인 의제나 쟁점으로 제안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본의 과거사 외교 문제가 불거져 국내 여론이 나빠지자 노무현은 2005년 태도를 바꿔, 강경하게 말했다. 그러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노무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위안부’ 문제 같은 일본의 침략 과거 청산은 한국과 일본에서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운동이 성장하는 것에서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이후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자신의 전략적 중심에 놓고 패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일본의 침략 과거 때문에 일본과 주변국들의 민중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금도 아베의 과거 침략 사실 부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채택 등은 대다수 한국인들의 불안감과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안보법제 반대 운동이 크게 성장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에 반대했었다. 향후 한일 군사 협력 문제나 일본 평화헌법 개정 등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미·일 지배자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계속 대중의 불만과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 5면 기사로 이어짐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도 더 나빠지리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낙천적인 희망적 관측가가 아닌 한 거의 없을 것 같다. 특히 중국 경제가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1월 4일치 일간지에 따르면, 중국 증시 폭락으로 거래 완전 중단). 중국 노동자 운동도 더욱 투쟁적이 되고 있다(〈노동자 연대〉164호).

“한반도 주변”(동아시아) 정세도 더한층 긴장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는 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움직임의 결과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런 상황 전개를 북한과 중국이 반길 리 만무하다. 하지만 북한은 최근 중국보다 러시아에 더 우호적인 외교를 시행하고 있다. 단순히 과거 냉전시대처럼 대륙세력 vs 해양세력 하는 식으로 세력 ‘균형’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균형이 형성되지 못하고(형성돼도 단기간일 뿐) 오히려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더구나 중국과 달리 러시아가 유럽(크림반도)과 중동(시리아)에도 개입하기 시작해, 단지 동북아시아 차원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듯한 상황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이는 2008년 경제 공황 이래로 그동안 꾸준히 나빠져 온 이 지역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요인인 것이다.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불안정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시행할 정책들도 더 사악해지면 사악해졌지, ‘인간적인 얼굴’로 순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노동자 계급에 대한 ‘노동개혁’ 공격은 총론에 해당할 입법 단계부터 각론에 해당할 시행 단계까지 노동자 운동에 철탄산줄임 것이다. 이런 일들에 맞서 노동자 운동은 그동안 좌파적 활동가들을 노조 집행부 직책에 선출해 오는 것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등장은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급속노조를 비롯한 다양한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의 선거 결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많은 좌파적 활동가들이 좌파적 집행부에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물론 이 과정은 불균등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오른팔과 왼팔 격이라는 현대차와 기아차 노조들의 지난해 가을 선거 결과는 전임 집행부보다는 조금 더 좌파적인 듯한 집행부가 선출됐음을 보여 준다. 현대중공업에도 좌파적 노조 지도자가 등장했다.

그러나 전체로 보아 노조 지도자에 대한 기대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채 여전히 우산 구실을 그들에게 기대하는 형태로 지속될 것 같다. 지도자들이 우산을 씌워 주면 투쟁에 나설 용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식 말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자들(노동자 계급의 자력 해방을 추구하는 종류의 좌파)은 올해도 노동자 운동에의 개입을 완강하게 지속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개입은 단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인 것도 해야 한다. 사회주의 정치에서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이라 함은 특정 부문이나 산업, 지역, 기업 등에 시야가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또

기존 국가권력(을 파트너로 삼는 게 아니라 그것)과 전면적 충돌을 염두에 두는 접근법을 뜻한다.

그리고 국제주의자인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사회’란 ‘국가(national) 사회’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제국주의 시스템을 뜻한다.

따라서 ‘정치적 노동운동’을 건설하려 애쓰는 것은 사회주의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에게는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건설하려 애쓰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우리 나라 노동운동은 그러지 못했다. 반미 민주주의 노동운동이 한 편에 있고, 급진적 반자본(반자본주의와는 구별된다) 노동조합 운동이 다른 한편에 있는 식이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미국으로 환원될 수 없다(이번호 차승일의 기사 참조). 또,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분리시켜, 반제국주의는 당장에 중요하지만, 반자본주의는 그다음 단계에서나 착수할 과제라는 식으로 단계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 노동운동이 민중운동 안에 용해돼서도 안 된다. 즉, 노동계급이 나머지 민중을 견인해야지, 노동계급이 민중의 요구와 정서와 투쟁 방법에 적응하는 민중주의여서는 안 된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독자적 요구와 투쟁 방법을 기꺼이 채택해야 한다.

한편, 반자본과 반자본주의는 다소 다르다. ‘자본’이란 추상적 범주로, 현실에선 다수의 개별 자본들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에 대항한 투쟁은 현실에선 흔히 개별 자본에 대항한 투쟁으로 나타난다. ‘총자본’이라고 강조한다 해도,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지칭체를 가리키려면, 엥겔스가 ‘이상적인(가장 알맞은) 집합적 자본’이라고 부른 국가를 의미하기 십상이다. 반면 ‘반자본주의’는 이유를 핵심 동력과 동기로 삼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그동안 노동운동 내 ‘좌파’는 제국주의 문제를 경시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한계나 약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단결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노동조합 운동이 ‘민중의 호민관’ 노릇을 하는 식으로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져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이원성과 이분법을 극복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그 방향은 반제국주의적인 동시에 반자본주의적인 노동자계급 운동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상이리라. 하지만 무한정 먼 미래로 미뤄 두는 것도 변증법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미래의 집을 지금 지을 수는 없어도 미래의 집을 위한 주춧돌 놓기와 벽돌 쌓기는 시작할 수 있다.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사회적 위기가 노동자들과 보통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계속, 또한 더한층 짓누를 게 뻔한 2016년, 저항을 효율화하고 보편화하기 위해 이 과제에 착수하자. 사회주의자에게엔 쟁취해야 할 미래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 일본 국가가 저지른 성노예화 범죄

이현주

이번에 한미일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걸림돌 정도로 인식하는 잔인한 자들임을 스스로 드러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선 지 24년이 지났고, 실제 피해를 당한 지 70여 년이 지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의 나이가 돼, 이미 세상을 뒤흔거나 죽을 날을 얼마 남겨 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도 잊혀질 수 없는 일이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제 식민기에 사기·유괴·납치에 의해 ‘군위안소’에 감금된 채 성노예 생활을 강요받았다. 당시 이들은 대부분 스무 살도 안 된 소녀들이었다.

이 범죄를 자행한 주체는 일본 군대와 정부, 즉 일본 국가였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면서 현지인들에 대한 일본 군인들의 범죄 행위가 늘어났다. 군대 내의 하극상 문제도 심각해졌다. 일본 군부는 군인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위안”을 제공할 필요성을 느꼈다. 병력을 약화시킬 성병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했다. ‘군위안소’는 1932년부터 있긴 했지만, 중일전쟁 발발 직후부터 훨씬 더 많이, 체계적으로 설치됐다.

‘군위안부’가 된 사람들은 여러 아시아 나라 출신이었지만, 그중 조선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인 ‘군위안부’는 ‘군위안소’의 설치가 확대되는 중일전쟁 발발 후부터 해방 전까지 대거 징모(국가에서 불러 모음)됐다. 현재 한국 정부가 추정하는 ‘위안부’ 피해자는 약 8만~20만 명이다.

이 여성들은 가난한 농촌 가정의 자식들이었다. 이들은 ‘여공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섰다.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농촌은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적 농업 정책에 가뭄·홍수까지 겹쳐 매우 피해진 상태였다. 농촌에서 식모살이나 애보게(아이를 돌보는 사람)를 하며 푼돈만 받던 가난한 어린 여성들에게 ‘여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회처럼 보였을 것이다. ‘군위안부’ 징모업자들은 여성들의 이런 사정을 이용했다. 그러나 이 여성들은 취직을 시켜 준다가에 돈을 벌러 간 것이지 성노예가 되고자 간 것이 아니었다.

일본 군인이나 경찰이 총부리를 겨누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징모업자들이 인신매매로 끌고 간 사례도 있었다.

지옥

‘군위안소’에서 ‘군위안부’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했다. 증언자들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다고 말한다.

증언자들의 말에 따르면, ‘위안부’들은 하루에 적게는 10~20명을 상대했다. 주말에는 군인들이 줄을 지어 들어왔기 때문에 몇 명을 상대했는지 셀 수조차 없었다. 쉬는 날은 거의 없었다.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힌 ‘위안부’들 사진 속 임신한 여성은 북한 피해자故 박영심 할머니(1921~2006).

‘위안부’가 기진맥진해서 기절하면, 일본 군인은 아편을 주사했다. 주말에는 군인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아편 주사를 놓았다. 어떤 때는 다른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임시 막사에서 그 부대의 거의 모든 병사를 상대해야 했다. 그리고 기절한 상태로 리어카에 실려 ‘위안소’로 돌아왔다.

관리인들은 군인을 상대하기 싫다고 반항하는 ‘위안부’들의 손가락을 자르거나 전기고문을 하거나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군인들의 폭행도 빈번했다. ‘위안소’ 이용 규정에는 ‘위안부와 주인을 폭행하지 말라’는 조항이 대부분 있었다. 그만큼 군인들의 폭행이 빈번했던 것이다. 당시 일본 군인들은 ‘위안소’를 “공동변소”라고 불렀는데, 이는 여성들이 얼마나 천대받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해 준다.

많은 여성들이 성병·결핵 등 질병에 걸리거나 아편중독·임신·출산·낙태 등을 겪은 뒤 죽었다. 일본군은 낙태시술을 하면서 아예 ‘위안부’의 자궁까지 제거해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자살 미수에 그치는 것은 불행이었다. 도망치다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고문받을 것을 알면서도 ‘위안부’ 여성들은 탈출을 시도했다.

“역사학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 중 살아남은 비율이 25퍼센트 정도일 것으로 추산한다. 전장에 투입된 병사, 대서양 노예무역에 의해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끌려갔던 흑인노예들의 사망률보다도 높다.”(K J Noh, 〈프레시안〉)

이런 생활을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일본 우익들의 망언(일본 총리 아베도 공유하는 인식)은 피해 여성들

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다.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일본군은 ‘위안부’ 여성들을 여러 방법으로 학살했다. 여성들을 참호에 밀어 넣고 폭탄을 던지거나, 매장하거나, 중병에 걸린 여성에게 독약 주사를 놓았다는 증언들이 있다. ‘위안부’에 관한 문서들은 불태워졌다. 조직적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1944년 10월 한 중국 기자는 그 참혹한 현장을 묘사하는 기사를 썼다.

“적이 완전 숙청된 지 한 시간도 안 돼 나는 곧 시내로 들어가 전장을 탐색했다 … 적의 시체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으며 … 담 모퉁이에 조선인 군위안부 15명의 시체가 한곳에 쌓여 있었는데 가슴과 유방이 도려내어져 있었고 흉색 녹색 옷들이 서로 얼룩거렸다. 그중에는 아직 기저귀를 찬 아기까지 끼어 있었다.”

일본이 패망한 뒤 열린 도쿄재판에서 미국은 위안부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일본을 처벌하지 않았다. 일본을 대소련 견제를 위한 동맹으로 키우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마치 위안부 희생자들을 위한 척하지만 일본의 많은 전쟁 범죄를 덮은 당사자이기도 하다.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군위안부’였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하며 살았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용기 있는 증언을 할 때까지 약 반세기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못하거나 성적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군위안부’ 생활은 이 여성들의 삶 전체를 파괴했다.

명백한 일본국가의 범죄

‘군위안소’의 창설·징모·운용·관리의 주체는 일본군이였다. ‘위안소’ 설치를 허가하고 통제·감독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일본 정부와 군에 있었다.

“위안소 설치는 파견군의 명령(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명령이 내려오면 전쟁터와 점령지 부는 현지에서 여성을 모집하든가 아니면 업자를 선정해서 일본·조선·대만에서 여성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파견군이 내무성·조선총독부·대만총독부에 의뢰해 현지 경찰이 업자를 선정해서 모집하는 경우도 있었다. 업자 및 여성의 도항과 전지·점령지에서의 이동에는 군이 편의를 제공했다. 군위안소로 사용할 건물은 군이 접수해서 업자에게 이용하도록 했으며, 건물의 개조도 군이 했다. 군위안소 이용규칙·이용요금 등도 군이 결정했다. 군위안부의 성병 검사는 군의 의무가 했으며, 각 부대는 군위안소를 감독·통제했다.”(《일본군 ‘위안부’ 그 역사의 진실》, 요시미 요시야키, 2013)

‘일본군은 “관여”만 했을 뿐 군위안소의 주된 운영 주체는 민간업자들이었고 이들에 의한 단순한 상행위였다’는 일본 우익들의 주장은 당시 일본의 전시 체제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다. 전시 통제 상황에서 업자가 제멋대로 전쟁터로 찾

아가 ‘위안소’를 만드는 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다.

마찬가지로 일본군이 강제로 징집한 적이 없으므로 일본 정부의 직접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도 책임 회피 논리일 뿐이다. 일본군이 직접 나서 여성을 끌고 가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말단의 징모업자들을 지휘하고 통제한 것은 일본군이었기 때문이다. 《조선인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제도》(2015)의 저자 윤명숙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군이 전면에서 나서면 조선인들의 반발을 살 게 분명한 상황에서 징모업자들을 활용해 여성들을 끌고 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시 조선인들은 출국하려면 반드시 거주지 관할 경찰서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점만 봐도, 조선총독부의 허가 없이 그 많은 여성을 동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군위안부’ 문제는 한 국가가 계획적·조직적·체계적으로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것으로서 명백한 국가 범죄다. 당시 일본 군인들의 처지에서 불인 “위안”부라는 명칭은 이런 본질을 가린다. 여성의 입장에서 이것은 성폭행이었다. 국가가 자행한 이 범죄에 일본 정부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요구다.



한국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외교의 골칫거리로 여겨 왔다. 박근혜가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된 직후 일본 외상 기시다 후미오를 청와대로 불러 접견하고 있다.

한국 지배자들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

1990년 들어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이래, 일본 정부는 국가의 분명한 법적 책임을 부인해 왔다. 그리고 설사 국제법상 책임이 있다 해도 그에 따른 보상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마무리됐고, 특히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의 이런 태도는 전쟁 범죄의 책임자들(그 후예들)이 현재 일본 지배계급의 핵심에 포진해 있고, 이자들이 일본의 재무장을 주도하는 것과 관계 있다. 일본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다.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데 과거의 제국주의적 전쟁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를 인정하고 진정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더 분개스러운 점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이런 인식을 인정해 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부정하지 않는 한, 정부 차원에서 일본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 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위안

부'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다.

그런데 한일협정은 과거를 묻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준 협정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과거를 묻지 않는 대신, 무상 자금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를 제공받기로 했다. 이후 이 돈은 박정희 정권이 국가 주도 수출 중심 공업화를 추진하며 장기 집권 기반을 닦는 데 긴요하게 쓰였다. 당시 이 협정은 강력한 대중적 반발에 부딪혔다.

한국 지배자들은 대중의 눈치를 보면서도 일본의 뜻을 거스르는 요구(즉,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인 일본 국가의 사죄와 법적 책임, 개인 배상 요구)는 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의 운영자로서 한국 지배자들은 '위안부' 문제를 한일 외교의 골칫거리로 인식해 왔다. 근본에서 이것은 한국·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제국주의적 야욕을 관철시키려는 미국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 1965년 박정희의 한일협정과 50년 후 그의 딸이 추진한 '위안부 협상' 모두 이런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국주의의 피해자들은 두 번 세 번 제국주의에 짓밟혔다. 다른 말로, 이는 제국주의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관련 기사 2~3면)

▶ 3면에서 이어짐

백지화돼야 마땅한 '위안부' 합의

김영익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가 나온 후, 이 합의에 대한 공분이 일었다. 합의 직후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뉴스와 논평을 내보냈고 박근혜도 직접 나서 이번 합의를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지만, 반대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다. 12월 30일 수요시위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1천여 명이 모였다. 그리고 집회에 참가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수백만 명이 이번 합의가 매우 부당하고 굴욕적이라고 여긴다.

무엇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할머니들은 “[박근혜] 정부가 우리를 두 번 세 번 죽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박근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피해 할머니들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했고, 협상 내용조차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다. '연휴 기간이라 할머니들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렸다'는 외교부 차관 임성남의 공색한 변명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분노와 배신감만 더 키웠다.

부당한 합의를 즉시 파기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12월 31일 청와대는 재협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리고 이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24년 전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그러면 정부도 이 문제에 손을 놓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협박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을 모두 “유언비어”라고 매도하면서, 반대 여론이 누그러지기를 기다릴 심산이다.

협박

'원점' 운운하는 청와대의 주장은 궤변일 뿐이다. 한일 두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년 넘게 고수해 온 입장에서 거의 진전이 없는 수준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처음 제기한 이후로, 대다수 한국인들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게 최소한 “피해자들이 납득할 조치”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라고 표현했으나, 이는 1993년 고노 담화의 표현을 그대로 베낀 것일 뿐이다. 이 표현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이 당시 일본군에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일본 외무상 기시다 후미오는 이것이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의미한다고 못을 박았다. 즉, 아베 정부는 여전히 당시 일본 국가의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일본 총리 아베의 '사죄'가 당연히 진정한 사죄일 리 없다. 심지어 총리가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대독 '사죄'였고, 합의 발표 직후 아베는 “일본의 다음 세대가 계속 사죄하는 숙명을 지면 안 된다”, “더는 '위안부' 문제를 사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도 없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에 일본이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대기로 한 게 배상이나 다름없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일본 외무상은 이 돈이 배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것은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은 회피한 채, 재단 출연금 형태로 비난을 모면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에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을 철거·이전해야 출연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위안부 지원 재단' 안은 과거 일본 무라야마 정

부가 국민 성금 형태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아시아여성기금” 안과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그때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배상”이 아니므로 “아시아여성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했다.

일본의 공식 사죄나 법적 책임 인정이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이번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약속해 줬다. 그리고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도 합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은 '위안부'는 물론이고 강제징용·핵피폭 피해자 등에 대한 배·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합의에도 유사한 문구가 삽입된 것이다. 이 문구가 향후 곤장 문제를 낳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향후 일본 지배자들이 '위안부' 문제에 또다시 망언을 일삼고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왜곡·은폐하는 일이 거듭되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기도 어려워졌다.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것은 더 큰 문제다. 이를 근거 삼아 일본이 유엔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이미 일본 외무상은 한국이 '위안부' 관련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녀상'

이처럼 일본 정부는 아무런 법적 책임과 배상의 무도 지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소녀상'의 철거·이전도 수용할 태세를 보였다. 그러니 일본 외무상이 '우리가 잃은 건 [재단 출연금] 10억 엔뿐이다' 하고 만족해 하는 것이다. 이번 합의로 일본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합의가 국내에서 크게 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듯, 박근혜 정부는 이번에 공식 합의문을 만들지 않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외교장관들이 합의된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위안부' 합의에 관한 공식 합의문을 만들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규정돼 국회 논의와 동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즉, 이번 합의는 내용부터 형식까지 모두 꼼수와 기만으로 점철돼 있는 것이다. 이런 합의는 당장 백지화돼야 마땅하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1965년 아버지 박정희가 강행한 한일협정 체결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그때 박정희는 한일협정을 밀어붙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집권 이후 처음으로 대중적 저항에 부딪쳐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이번에 박근혜도 '위안부' 합의를 끝까지 고수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도 '위안부' 합의에 대한 광범한 반대 정서에 직면했다.

'위안부'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공산도 있다. 조만간 일본 정부는 '소녀상' 철거가 재단 출연금 지급의 전제조건이라고 공식화할 가능성이 큰데, 그리 되면 '위안부 지원 재단'은 출범 전부터 뼈저덕될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이 재단을 거부할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후에 일본의 침략 과거 축소·왜곡 문제 등이 결국 다시 불거질 텐데, 그때마다 박근혜 정부의 이번 '합의'가 큰 문제였다는 점이 계속 부각될 것이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일 군사 협력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거센 비판과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부담도 떠안게 됐다. 박근혜가 이번 합의를 외교 치적으로 포장하며 마냥 자위할 수는 없는 까닭이다.

장기적 전쟁과 그에 맞서서

차승일

1970년 5월 하버드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들이 백악관을 방문했다. 정부 참여 경험이 상당한 그 교수들을 이끈 인물은 개입 이론가 토머스 셸링이었다. 그들은 한때 하버드대학교의 동료 교수였고 지금은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의 안보보좌관인 헨리 키신저를 만났다. 그 교수들은 미국의 캄보디아 침공에 항의했다.

미국은 베트남인종해방전선 게릴라 전사들의 ‘피신처’를 공격하기 위해서 라베 캄보디아를 침공했다. 이 침공으로 미국 대학생들은 항의 물결을 일으켰고, 안타깝게도 켄트주립대학교에서 4명, 잭슨주립대학교에서 2명이 주방 위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진보적 역사가 그레고 그린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키신저의 옛 동료 교수들은 닉슨과 키신저가 이미 1년 전부터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비밀리에 폭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 [그래도] 반대할 이유는 충분했다. 셸링은 ‘역겹다’고 말했다.

“오늘날 미국에는 당파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정이 있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나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은신처’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은신처가 미국의 적국이 아닌 주권국에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을 전제로 조지 W 부시는 2003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고 버락 오바마는 소말리아·예멘·파키스탄으로 무인 폭격기 공격을 확대했고 최근에는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 전사들에 대항하는 군사작전을 펼친다.

“1970년에는 이런 식의 정당화가 용인되지 않았다. 셸링 등 하버드대학교 교수들은 키신저가 공산당의 ‘피신처’

를 파괴해야 한다며 [캄보디아]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것에 반대했다. 한 기자가 그 교수들의 반대 논리를 이렇게 요약했다. 중립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예컨대 테러리스트를 일소하겠다며 또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데 이용할 선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1970년에는 용납하기 힘들었던 이례적인 일이 거의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정상적인 일이 돼 버렸다. 그 랜딘은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책임 회피

역사는 긍정된다. 미국의 전례 없는 역사적 성공으로 예외주의가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부정된다. 또는 적어도 과거를 인과관계의 연속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정된다. 무슨 말이고 하니, 어떤 조치가 부른 역풍이 … 그 원인을 깨끗이 씻어 내며 새 기원 설화를 제공하고 우리 국경 바깥에 널리 퍼진 혼란에 책임을 씌운다는 것이다.

“이런 책임 회피는 최근에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2003년에 우리를 이라크로 몰아넣었던 그 정치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시의 결정이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의 성장을 도왔더라도, 이슬람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미국이 장차 담대한 행동을 벌여야 할 이유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전 부통령 딉 체니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11~12년 전의 일을 놓고 알가왈부하느라 시간을 허비한다면 눈앞에서 커지고 있는 위협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데올로기적 병증은 이제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특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성향 정치인들도 키신저의 길을 따르려 한다.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2015년 11월 13일의 파리 참사에 대응하며 아이시스에 맞서 “무자비한 전쟁”을 벌이겠다고 다짐했다. 올랑드는 프랑스가 리비아·말리·시리아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이 파리 참사라는 역풍을 불렀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이렇게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2003년 3월 이라크 침공에 찬성표를 던졌던 영국 노동당 우파 국회의원들이 2015년 12월 4일에도 똑같이 분별 없는 짓을 한 데서도 드러났다. 그들은 영국이 미국 주도의 시리아 폭격 작전에 동참하는 데 찬성했다.

〈가디언〉기자 제임스 미크는 전체 국주의를 옹호하는 노동당 인사가 보인, 차마 입에 담기 참담한 추태를 보며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노동당 예비내각의 외무장관 힐러리 벤의 폭격 찬성 연설을 들으니 1930년 윈스턴 처칠이 홀로 히틀러의 위협을 경고한 연설이 떠올랐다. … कै머런이 시리아 폭격에 반대하는 사람들 “테러리스트 동조자’로 간주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다. 그들에게 힘을 보탠다며 [힐러리 벤이] 한 말은 기이하다. 그는 곧바로 이슬람국가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들을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반복하는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폭격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품위 있고 훌륭한 분들이다. 비록 나 자신과는 달리 그들은 동성애자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내던져지고, 나이가 너무 한다면 눈앞에서 커지고 있는 위협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데올로기적 병증은 이제는 미국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 특히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성향 정치인들도 키신저의 길을 따르려 한다.

미국 제국주의와 중동

그러므로 도덕적·정치적으로 책임성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역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은 1990~91년 이레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중동에서 벌여 온 장기적 전쟁의 최신 단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전 시기이자 냉전기인 1945~90년에도 중동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은 1948년, 1956년, 1973년, 1982년에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에 제국주의 국가들의 군사 개입은 주로는 쇠퇴하는 식민지 열강(영국과 프랑스)의 방어진 형태를 취했다.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는 1956년 수에즈 원정과 1954~62년 알제리 전쟁에서 큰 골육을 맛봤다. 특히, 이들의 수에즈 원정 실패 덕분에 미국이 중동에서 유력한 제국주의적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주로는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에 군사 원조를 하는 형태로 중동에 개입했다. 그 두 동맹국은 서로 깊이 증오하는 종교 국가들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1979년은 분명한 전환점이었다. 첫째,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 미국의 핵심 동맹인 무함마드 레자 팔레비 국왕이 타도됐고, 이에 자극받아 서방의 지배에 대항해 급진 이슬람주의 형태의 새로운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도전이 일어났다.(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레반은 내전기에 헤즈볼라가 성장한 것이다.)

둘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이는 초강대국 간 경쟁의 무대가 중동으로 확대됐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소련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성장하고 있다고 착각해 그에 맞춰 국방비를 늘리고 있던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는 1980년 1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현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보내며 위협하고 있는 그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전세계 수출용 석유의 3분의 2 이상이 그곳에 매장돼 있다. … 소련은 이제 전략적 지위를 굳히려 한다. 이는 중동산 석유의 자유로운 이동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 우리의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야 한다. 페르시아만[걸프] 지역의 석유를 지배하려는 외부 세력의 시도는 모두 미합중국의 사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침해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물리쳐야 한다. 필요하면 군사력을 쓸 수도 있다.”

이 카터 독트린은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시작으로 평가된다. 카터는 소련이 이란 혁명을 이용하려 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



제국주의의 개입은 중동 민중의 격심한 고통을 낳았다. 절실하게 생필품을 구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혀 있었다. 그래서 카터는 대통령령 제 59호를 발표해 소련 군대의 걸프 진격에 대항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카터는 신속기동군도 창설했다.(신속기동군은 나중에 중부 사령부로 재편된다. 중부사령부는 지난 25년 간 여러 전쟁을 기획했다.)

그럼에도 레이건 정부(1981~89년)는 레바논에 잠깐 발을 담궜다가 1983년 자살 폭탄 공격으로 해병대원 2백41명이 사망한 뒤 신속하게 개입을 줄였다.(그래도 맑은 거칠게 하고 군비 지출을 늘렸다.) 레이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동 개입은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을 후원한 것이었다. 1980년 9월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하자 레이건 정부는 후세인을 도왔다. 그 결과, 전쟁이 장기화돼 20세기에 일어난 재래식 전쟁 중 가장 긴 전쟁이 됐고, 8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지만, 결국 이란 혁명을 교살하지는 못했다.

그래도 미국으로서의 손놓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랬다가는 전쟁에 온통 매달리고 있는 두 [지역] 강국의 아심이 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란이 승기를 잡는 듯한 때 미국 해군과 공군이 선택적으로 사용돼 전황을 이라크에 유리하게 바꿨다.

미국의 진정 새로운 개입 시기는 이 긴 전쟁에서 결국 승자가 된 후세인이 욕심을 부려 쿠웨이트를 점령한 1990년 8월에 시작됐다. 그러나 여기서 맥락의 변화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서방·아랍 국가들의 연합이 이라크를 상대로 벌인 1991년 초 걸프전은 냉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발발했다. 한편으로 미국은 경쟁 제국주의 블록이 붕괴한 덕분에(1991년 8월)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 방해되는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 “베트남전 때와 달리 미국은 다른 강대국이 적군에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1991년 걸프전은 2003년 이라크 침공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승인을 얻었다. 해체를 목전에 둔

소련이 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약해진 덕분이었다.

냉전 종식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초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경쟁이 해체되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들 간 경쟁이 더 유동적으로 변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 후세인의 이라크를 쉽게 격퇴한 것은 미국 군사력의 우월함을 잘 보여 줬지만,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약화되고 있었다. 서구 진영 안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양대 진영 바깥에서는 중국이라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성장했다.

냉전이 끝난 뒤 들어선 미국 정부들은 모두 미국의 세계적 헤게모니를 견고히 지키고자 애썼다. 그 첫 조처는 신자유주의를 세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특히 빌 클린턴 정부(1993~2001년) 때의 특징이었다. 이는 세계 모든 국가의 빚장을 열어 미국 자본과 상품이 들어갈 수 있게 하려는 조처였다.

둘째, 중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유지할 목적으로 미국은 군사력을 거듭 사용했다. 중동에 대한 헤게모니를 유지해야 다른 국가들(잠재적·실제적 경쟁자들을 포함해)이 “세계 수출용 석유”라는 핵심 원료에 접근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군사력 사용은 조지 W 부시(2001~09년) 정부 때 특히 공격적이고 오만한 형태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바마도 비록 훨씬 더 조심스럽고 선택적이지만 계속해서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란 전쟁들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측면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걸프 연안국들의 관계다. 1945년 2월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로즈벨트(루스벨트)는 처칠·스탈린과 알타회담을 가진 뒤 귀국하는 길에 수에즈 운하를 둘러 사우디아라비아의 왕 이븐 사우드를 만났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로즈벨트는 주미 영국 대사 헐리팩스 경에게 이렇게 말했다. “페르시아만[걸프] 석유는 … 당신들 것이다.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석유는 당신들과 공유하겠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는 우리 것이다.”

약 40년 뒤인 1987~88년 미국 해군의 걸프 파견을 촉발한 것은 이란의 쿠웨이트 유조선 공격이었다. 1990년 8월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점령하자 미국은 첫 대응으로 군대를 파병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키려 했다. 이 조처는 두 가지 역풍을 불렀는데, 그중 하나는 오사마 빈라덴이 알카에다를 건설한 것이었다. 빈라덴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주의 전사들을 고무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서 싸우도록 했을 때 구국한 연줄을 이용해 알카에다를 건설했다. 알카에다는 미군이 이슬람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에 맞서 투쟁하는 조직을 표방했다.

걸프 연안은 이제 세계 자본주의의 중요한 허브가 됐고, 이 지역의 왕조 정권들은 사실상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을 운영한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이 중동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세일 혁명’으로 미국 자체의 소비용 석유와 천연가스는 충분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계속된 군사 개입이 낳은 최종 결과는 미국 제국주의에게는 큰 피해가 아니었다. 오히려 중동의 보통 사람들이 입은 피해가 더 극심했다. 고대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제국을 비난한 어느 브라타니아(오늘날의 영국) 지도자의 말을 기록했다. “그들은 패화를 만들어 놓고는 평화라고 부른다.” 서방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초래한 결과에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패배했을 뿐 아니라, 이라크를 잠깐 동안이나마 안정화시키려 하면서 이란의 이슬람공화국과 긴밀히 연결된 종파적인 시아파 정권에 의존했다. 그 결과로 아이시스가 자히드 세력과 이라크군 장교 출신자들을 규합하고 불만이 큰 소수파 주민인 수니파 이라크인들의 수동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겨났다.

그 뒤 2011년 혁명 물결이 아랍 세계 전역을 휩쓸며 튀니지와 이집트에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시리아 난민들 2015년 11월 13일 그리스-터키 접경지역.

서 정권을 타도했고, 다른 정권들도 풍전등화의 처지에 놓였다. 결국 반란은 진압됐지만, 정치 구조는 훨씬 더 취약해졌다. 지역 수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연안국들은 반혁명을 조직하며 이집트에서 새 군부 독재가 들어설게 도왔고, (무슬림형제단을 겨냥해) 살라피주의(국도로 보수적인 수니파 이슬람) 자히드 운동을 고무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런 행보는 시리아에서 종파적 내전을 벌여 혁명적 반란을 진압하려 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노력과 충돌했다.

아사드를 제거하기 위해 시리아에 개입할지 말지를 두고 얼마간 망설인 뒤 에 오바마 정부는 거리를 두기로 했다.

정치적 해체, 제국주의간 경쟁, 아이시스

이 전략은 군사력을 이용해 중동을 재편하려 한 조지 W 부시의 전략만큼이나 재앙적이었다. 후세인 제거가 낳은 주요 결과이기도 한 국가의 붕괴는 이제와 이라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아랍 세계 동부의 두 핵심 국가인 이라크와 시리아는 해체된 상태다. 2011년 나토가 폭격한 리비아도 그렇고, 예멘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들은 모 두 지역 강국들의 대리전 무대가 됐다.

지역 수준에서 핵심적 경쟁자들은 이란(이라크·시리아 정권의 주요 후원자이다)과 사우디아라비아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살만이 국왕으로 취임한 2015년 1월부터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폈고, 미국 세일 석유 생산 업체들에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석유 감산을 거부했고, 이란이 후원하는 세력이 예멘 정권을 위협한다며 예멘에서 끔찍한

▶ 8면으로 이어짐



2005년 3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남부 바빌 주를 순찰하는 미군 병사들



“제2의 슈퍼파워”라고 불린 2000년대 초 반전 운동 2003년 2월 15일 런던에서 열린 반전 집회.

▶ 7면에서 이어짐

전쟁을 일으켰다.

터키와 카타르도 주요 행위자이다. 둘 다 시리아에서는 지하드 세력을 고무하고, 리비아에서는 통치권을 주장하는 이슬람주의 세력을 후원한다.(이와 경쟁하는 리비아의 세속주의 정부는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의 후원을 받는다.)

일부 좌파는 이런 혼란이 서방 제국 주위에 유리하다거나 심지어는 미국이 고안한 정교한 계획의 산물인 것처럼 본다. 그 이유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나오미 클라인의 “재난 자본주의” 개념을 옹호한다. 그들의 주장인즉, 오늘날 미국 자본주의는 “폭격과 재건” 전략을 추구하며 전쟁을 조장하고 그 틈에 미국 기업들이 폐허가 된 나라에 들어가 재건 사업을 벌여 이윤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구조와 이해관계를 초보적 수준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2015년 <포춘>이 선정한 미국 5백대 기업 중 상위 10곳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렇다. 월마트, 엑손, 셰브론, 버크셔 해서웨이, 애플, 제너럴 모터스, 필립스66,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 CVS 헬스. 최대 군수업체인 보잉은 27위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기업 중 에너지 기업 단 세 곳만이 클라인이 말한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에 속한다. 그러나 이조차도 정확한 분류는 아니다. 그 에너지 기업들도 황폐해진 나라에서 재건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주로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고 정제하고 판매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군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주로 민간 시장에서 이윤을 벌어들인다. 미국 기업들은 미국 국방부에 의존해 전 세계 민간 시장과 투자처에 접근하지만, 시리아나 리비아에서처럼 지하드 세력이 유전을 장악하는 상황은 미국 기업들의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

어떤 좌파들은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파괴하려 판을 썼다고 주장한다. 아랍 민족주의 성향의 바트당이 통치해 온 이 나라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는 눈엣가시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후세인과 아사드를 반제국주의 투사로 치켜세우는 과장의 측면이 있지만, 미국이 그 둘을 제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후세인과 아사드를 제거하는 것과 이라크와 시리아의

국가들을 해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비록 두 국가의 해체가 미국이 추구한 정책이 낳은 의도치 않은 결과라고 해도 말이다.

국가 해체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파리 참사에 대해 자신의 개성을 잘 보여 주며 매우 훌륭한 주장을 내놓았다. 바디우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붕괴를 그가 “구역 만들기”라고 이름 붙인 제국주의적 행위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구역 만들기’는 “비국가적 약탈이 일어나는 인류국가적 구역”이 생겨나는 것을 뜻한다. 바디우가 주장하길, 아이시스는 “국가가 사라진 공백을 점유하며 무장한 야만적인 자본주의적 기업”이다. 바디우는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정한 현상을 포착했는데, 워싱턴 컨센서스 하에 강요된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인한 국가의 약화가 사태의 주요 원인일 것이라는 점이다.

‘구역 만들기’는 9·11 사태 이후 마이클 만이 “배제하는 제국주의”라고 부른 것이 만들어 낸 극단적 결과로 봐야 한다. ‘배제하는 제국주의’는 “세계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이 대부분 초국적 자본주의로 의미 있게 통합되지 못하고, 자본주의는 그 나라들에 투자하거나 그 나라들과 교역하는 것을 너무 위험한 일로 보며 그 나라들을 배제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이것의 해악적 효과는 제국주의 핵심부에도 부정적 반작용을 가할 수 있다. 현재 중동에서 정치적 해체가 확산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세계 자본주의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 된 이곳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시리아로부터의 대탈출이 유럽의 난민 위기로 이어졌다. 최근에 일어난 테러 사건들은 선진 자본주의의 핵심부 중 하나인 유럽연합도 지중해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미숙한 수습 미술사처럼 미국은 자
신이 부른 요괴 앞에서 겁에 질려 있
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혼돈 속에서 태
어난 아이시스는 서방의 중동 지배에
도전하는 주요 세력으로 변모했다. 여
러 음모론이 있지만, 아이시스는 직접
적으로는 아니면서 이 지역의 동맹국을
통해서든 미국 제국주의가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 사우디아라비아·카타
르·터키가 수니파 지하드 세력을 전
폭 지원한 것이 아이시스의 성장에 일

조했다면 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시스는 독특한 정치프로젝트로, 이라크 점령과 시리아 전쟁이 초래한 파괴와 아랍 혁명의 패배 덕분에 원시적 형태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고, 현재의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슬람 칼리프 국가를 재건한다는 복고적 공상을 기초로 전 세계에서 전사를 끌어모을 수 있었다.

서방 제국주의가 중동에서 초래한
재앙은 아이시스가 성장하는 조건을
만들었지만, 아이시스 지도부는 그 나
름의 잔혹한 방식으로 그 조건이 창출
한 기회를 붙잡아 자기식의 종파적이
고 반혁명적인 과업에 착수했다. 아
이시스에 관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할
가치가 있다. 런던대학교 동양·아프
리카학연구대학(SOAS) 애덤 하니에
교수가 지적하듯이, 아이시스는 “반제
국주의적 대응의 그 어떤 것도 나타내
지 않는다.”

이 주장은 객관적 상황을 볼 때 두 가지 점에서 타당하다. 첫째, 아이시스가 약탈과 과시적 폭력에 주된 기반을 두지 않는 안정적 국가를 건설할 수는 없다. 둘째, 아이시스가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새 국가의 지배자들은 머지 않아 자본주의 세계 체제와 타협하며 자신의 공상적 이상을 훼손할 것이다. 1978~79년 혁명 이래 수십 년 동안 이란을 통치한 이슬람공화국이 밝아 온 궤적이 딱 그랬다. 최근 이슬람공화국은 미국이라는 ‘대악마’ 및 ‘세계 열강’과 핵합의를 이뤘다.

그럼에도 이란의 사례가 또한 보여 주는 것은, 이런 객관적 제약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시스가 반제국주의적 세력으로 **비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이시스가 초기에 공개한 영상 중 하나는 이라크-시리아 국경을 파괴하는 퍼포먼스였다. 시리아-이라크 국경은 1916년 영국과 프랑스가 오트만 제국의 아랍 속국들을 나눠 가지며 맺은 사이크스-피코 협정으로 생긴 것이다. 아랍 혁명이 패배하며 세속적 좌파는 물론이고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판 개혁주의도 주변화된 상황에서 아이시스가 거둔 군사적 성공은 제국주의에 타격을 입히길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나라의 무슬림 중 소수가 아이시스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중동의 재앙에 대해 말할 마지막 측면이 남았다. 지역 강국들 간의 경쟁에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외쳤던 2011년 시리아 혁명
바샤르 알 아사드는 혁명을 진압하려고 종파적 내전을 일으켰다.

제국주의 간 경쟁이 얽혀 있다는 점이다. 냉전 때 미국의 대중동 정책의 주요 목표는 소련을 중동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었다. 미국이 거둔 주요 성공 사례는 두 가지가 있다. 1963년 미국은 이라크에서 민족주의적 군사 정권인 아브드 알카림 카심 정권을 전복했다. 1972년에는 이집트 대통령 안와르 사다트가 소련과의 동맹 관계를 끊도록 했다. 이집트와 소련의 동맹 관계는 사다트의 전임자 가말 압델 나세르가 영국·이스라엘에 맞서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기 위해 맺은 것이었다.

중첩된 경쟁

1973년 10월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은 워터게이트 추문으로 제기능을 못하게 된 미국 대통령을 대신해 소련의 중동 파병 시도에 대응했다. 소련의 브레즈네프는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정전을 강요한다며 일방적으로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했고, 이에 미군은 비전시 최고수준의 경보인 방위준비태세(데프콘)Ⅲ를 발령했다. 키신저는 이렇게 설명했다. “소련이 중동에 군대를 파병하기 위해 무엇을 핑계로 대든 우리는 무력을 써서라도 저항할 태세가 확고히 돼 있다.” 브레즈네프는 몰라섰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정권들은 미·소 두 초강대국 진영 사이에서 계속 책략을 부렸다. 이라크의 후세인은 1980년대에 서방 진영으로 기울었다가 1990~91년 전쟁 이후 고립됐다. 그 결과 중동에는 아사드(의 시리아)만이 러시아의 믿을 만한 동맹으로 남게 됐다. 이 관계가 이제는 미국에 악재가 됐다. 2015년 9월 30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시리아를 공습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전환점이었다. 푸틴의 동기는 두 가지인 듯하다. 첫

째,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에 대해 서방 열강이 채택한 러시아 고립 정책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둘째, 아사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테러리즘에 맞서 싸운다”는 미사여구를 사용하지만, 이 말은 그저 아사드에 맞서는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

최근의 러시아에 대한 분석으로 논
여겨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페리 앤
더슨의 분석이다. 앤더슨은 이렇게 묘
사한다. “푸틴은 러시아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는 서방 자본주의와 연결
돼 있지만 운영 면에서는 독립되도록,
즉 포식자의 포식자가 되도록 건설할
수 있다고 믿지만, … 그것은 언제나
순진한 착각이다.”

미국의 경쟁자로서 현재 러시아의 위
세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군대를 재정비
했음에도 옛 소련의 위세에 미치지 못
한다. 예전만 못한 러시아 경제가 만성
적으로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고, 세계
금융시장에 통합돼 있다(이 덕분에 미
국과 유럽연합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효과를 내는 것이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라크에서 미국이 패배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확장하는 등 변화된 상황 때문에 미국 제국주의는 약해졌고, 그래서 제국주의 간 경쟁에서 지위가 더 취약해졌다. 중국은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헤게모니에 큰 위협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서로에 대해 조심스럽게 책략을 부리고 있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런 사태 변화 때문에 미국은 군사적 행동을 벌이는 데 더 신중해졌고, 그 덕에 러시아가 주도권을 쥐 여지가 더 생겼다.

서방 열강은 아이시스에 대항한 공동 군사작전을 펴기로 했다. 그들이 성

공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군사적 이유와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는, 시리아 안에서도 바깥에서든 아이시스 격퇴를 우선 목표로 삼는 세력이 거의 없다.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떠받쳐 중동 지역 내 자신들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두 국가가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바샤르 알아사드 개인은 버릴 수 있겠지만, 아사드가 지켜 온 질서를 버리려 하지는 않을 것이다.) 터키·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은 서로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의 우선순위는 아사드를 제거하는 것이다. 혁명에서 태어난 시리아 내 세력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세력 지형을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한다.

시리아 반군에 관한 한 연구를 보면 시리아 반군은 2백28개가 있으며, 정권과 실질적으로 맞서 싸우는 세력들에게 알카에다의 지부인 자바트 알누스라(누스라 전선)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존재이다.

“러시아의 공습이 심화할수록 시리아 반군들은 [시리아] 정권과 그 동맹에 대항한 전투에서 더 강한 세력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길 더 바랄 것이다. 그런 보호를 바라는 많은 단체들은 이미 부득이하게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인 자바트 알누스라와 군사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반군들이 더 큰 공격을 받을수록 이 추세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 자바트 알누스라와 함께 군사작전을 펼치는 세력이 모두 자바트 알누스라의 관점·목표·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자바트 알누스라가 전투에서는 가장 능력이 좋은 세력이므로, 군사적 필요 때문에 많은 반군이 그들과 협력한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찰스 리스터는 이렇게 말한다. “아사드 정권에 대항한 싸움을 조만간 접을 [반군] 단체는 거의 없다. 아사드, 이란, 이제는 러시아와 싸우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

가 됐다. 아이시스는 부차적 목표다.”

쿠르드노동자당(이하 PKK)의 시리아 조직인 쿠르드민주연합당(PYD)은 서구 좌파들이 많이 호의적으로 보는 세력인데, 미국의 공습에 힘입어 아이시스와 싸우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 그런데 쿠르드족의 목표는 독립된 쿠르드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고, 이는 아랍 지역에서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쿠르드족의 전진에 대해 터키 정부는 협약하게 반응했다. 터키 정부는 PKK에 맞설 세력으로 수니파 지하드 세력의 성장을 용인할 수 있다. 이 사례만 봐도 아이시스 격퇴가 대다수 세력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 알 수 있다. 2015년 12월 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중지와 대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는 전쟁을 끝내기보다는 여러 세력들 간 흥정의 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통

어쨌든, 아이시스 격퇴는 군사적으로 만만찮은 일이다. 이제 아이시스는 잘 무장하고 사기도 높은 전사 수만 명을 거느린 상당한 전투 집단이 됐다. 시리아 동부의 라카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을 꼭 틀어쥐고 있는 아이시스를 격퇴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중동 국가의 군대는 할 수 없는 일인지 모른다.(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경쟁국 모두가 시리아에 몰두하는 지금 상황을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시리아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겪을 끔찍한 고통을 논외로 치더라도 지금 시리아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이 나라에 개입하는 여러 국가들의 공군이 서로 어깨를 부대끼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말 터키가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한 것은, 1949년 나토가 창설된 이래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첫 번째 실질적 전투였다.

좌파들의 혼동

좌파들의 대응을 보면 혼란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슬라보예 지젝이 가장 심하다. 지젝은 지난 20년 동안 마르크스주의적 철학에 대한 흥미를 높이는 데 기여했고, 많은 운동과 투쟁을 고무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지젝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그리스 시리아 정부가 유럽연합에 굴복하는 것을 어떻게든 옹호하고,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외국인혐오적 반응에 거둬 공감을 표하고, 파리 참사에 대해서는 좌파가 서구의 가치를 옹호해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유럽 중심주의 반대 입장의 모순은 … 세계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서구 문화의 가치가 더는 필요 없게 된 매우 역사적인 순간에 서구를 비판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비판적으로 해석하면 서구 문화의 여러 가치들(평등주의, 기본권, 언론의 자유, 복지국가 등)이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바로 이때, 유럽 중심주의 반대 입장은 서구 문화의 가치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린 공산주의 해방 사상 전체가 철저히 ‘유럽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인가?”

파리 공격에 대응해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1월 19일 프랑스 의회는 압도 다수의 찬성으로 국가비상사태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급진좌파라고 일컬어지는 좌파전선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젝이 지키기를 바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 조처에 반대 투표를 한 사람은 사회당 소속 의원 세 명과 녹색당 소속 의원 세 명뿐이었다. 이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파리 기후 회담을 겨냥한 항의 시위가 금지됐다. 다른 나라의 좌파 정당들은 더 바람직한 입장을 취했다. 독일 의회에서 좌파당(디링케)은 독일이 중동에 파병(비록 전투병은 아니지만)하는 전례 없는 일에 반대했다.(예를 들어 독일은 2011년 나토의 리비아 개입에 반대했다.)

지젝과는 다른 혼란도 있다. 공산당 출신 활동가들은 유럽 평화운동에 상

당한 영향력이 있다. 그 기원은 냉전 초기 국면에서 공산당들이 평화운동을 벌인 것에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때문에 최근 몇 년 동안 좌파들 사이에서 진영 논리(미국의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더 ‘진보적인’ 세력으로 보아 지지하기)가 부활했다. 진영 논리에 따라 서구 반전 운동의 많은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위기에서는 푸틴의 러시아에 공감하고, 시리아 내전에서는 심지어 아사드 정권에 공감했다. 이런 입장은 제국주의의 성격을 아주 크게 오해하는 데서 비롯한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배력을 둘러싸고 서로 경쟁을 벌이는 체제이다. 그러나 진영 논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북반구의 지배자들뿐 아니라 남반구의 지배자들에 맞서는 투쟁, 또한 서구 지배자들뿐 아니라 동구 지배자들에 맞서는 투쟁의 중요성을 깎아내린다.

그러므로 진영 논리는 이론적 오류 이상의 문제다. 정치적으로도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 사례는 영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월 2~4일 영국 하원에서 여당인 보수당 의원뿐 아니라, 야당인 노동당의 우파 의원들도 영국의 시리아 폭격 참가에 찬성하며 오랫동안 반전운동을 벌인 제러미 코빈을 맹비난했다. 전쟁저지연합도 집중 공격을 받았다. 전쟁저지연합과 코빈(여전히 전쟁저지연합의 대표이다)의 관계 때문에 노동당 우파와 기업주 언론들은 전쟁저지연합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것이다. 이런 공격은 경멸받아 마땅하고 이기적인 공격이다. 그러나 전쟁저지연합은 영국 역사에서 가장 대중적인 운동을 조직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반전 운동이 절정에 달한 2003년 2월 15일 영국에서만 무려 2백만 명이 반전 시위를 벌였다. 그날,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도 반전 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운동이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전쟁저지연합의 지지 기반은 줄었고, 이는 혁명적 좌파의 분열로 이어졌고, 전쟁저지연합의 일부 지도자들은 스탈린주의 출신 활동가들을 점점 더 많이 지도부로 영입했다. 그 결과 전쟁저지연합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것을 용인하고,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만행에 침묵하고, 시리아 혁명 지지자들을 적대하는 인사들에게 연단을 내주었다. 이런 오류를 파고들어 우파는 반제국주의 투쟁의 한 수단인 전쟁저지연합을 파괴하고 더불어 코빈을 약화시키려 한다.

중동이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제국주의가 핵심 문제라는 점이다.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 등은 중동에서 좋은 일을 결코 할 수 없다. 그 국가들은 중동에서 손을 떼어야 하고 중동 민중이 스스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라는 목표를 이를 길을 찾아야 한다. 2011년 아랍 혁명 때 바로 그런 움직임이 잠깐 나타났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 서방의 좌파는 반전 운동을 재건해야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각국 정부들이 장기적 전쟁을 끝내도록 그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이 기사는 Alex Callinicos, ‘Resisting the long war’, *International Socialism* 149(Winter 2016)에 기초해서 작성했다.



중동 해방의 진정한 길을 힘껏 보여 준 아랍 혁명 2012년 4월 아집트

시리아인 압둘 와합 인터뷰

“모든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지난해 3살 꼬마 난민 쿠르디의 죽음에 이어 올해 초에도 2살짜리 시리아 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 인구 2천3백만 중 1천2백만 명이 난민이 된 시리아인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을 듣기 위해 한국에 있는 시리아인 압둘 와합 씨를 2015년 12월 23일에 만났다. 그는 법학을 공부하려고 2009년에 한국으로 온 유학생이다. 현재 시리아 난민 지원 단체인 '헬프 시리아' 기획국장으로,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조순진

시리아와 주변 국가들의 난민캠프
상황은 어떤가?

캠프마다 나라마다 겪는 어려움이 다르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모두 나쁘다. **요르단** 요르단 난민캠프는 사막에 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주 춥고, 여름에는 덥고, 모래바람이 엄청 심하고, 물이 너무 부족하다.

음식도 썩 좋지 않다. 난민캠프가 직접 지원해 주는 음식은 없고 난민들이 알아서 사 먹어야 한다. 난민캠프에는 마트가 두 개 있는데, 그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카드로 1인당 한 달에 19달러를 받는다. 그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데, 가격은 캠프 밖에 있는 마트의 두 배다.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 그래서 보통 8~17살 청소년들이 난민캠프 밖으로 탈출해 돈을 벌어들인다. 불법으로 일하는 것이라 임금도 일반인들의 거의 절반만 받는다.

난민캠프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지 못한다. 교사는 요르단 사람인데 한 교실에 학생이 120~130명이나 된다. 어떤 아이들은 옷을 너무 얇게, 어떤 아이들은 너무 두껍게 입는다.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사계절 내내 한 벌만 입는 것이다.

요르단에 난민이 60만 명 정도 있는데 약 8만 명은 난민캠프에 있고, 나머지는 캠프 밖에서 산다. 요르단에서는 일하고 싶으면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1년에 6백 디나르인데 한국 돈으로 1백~1백2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2백 디나르밖에 모을 수 없다. 또, 허가증 받기가 어려워서 그냥 허가 없이 일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

레바논 레바논 상황은 요르단보다 훨씬 나쁘다. 레바논 인구가 3백만 명인데 시리아 난민도 거의 3백만 명이 나 된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일상생활도 요르단보다 훨씬 어렵다. 레바논 정부는 난민캠프를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탓에 어떤 레바논 사람들은 시리아 난민을 상대로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집이 조금 크거나 땅이 있으면 텐트를 설치해서 난민에게 돈을 받고 빌려 준다. 보통

텐트 하나당 한 달에 1백 달러 정도 받는다. 텐트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유엔이 난민을 위해서 주는 음식 등을 받아서 난민에게 나눠 주지만 90퍼센트는 돈을 받고 [제3자에게] 팔아버린다.

또, 레바논에서는 정치 성향에 따라 난민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시아파 세력이나 헤즈볼라가 사는 지역에서는 시리아 난민을 보면 바로 감옥에 보내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 괴롭힌다. 그 세력들은 시리아 정부와 친하기 때문에 난민들을 보면 '네가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해서 이렇게 됐다'며 복수하는 것이다.

레바논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은 병원에 아예 가지 못한다. 어떤 여성은 임신하고 출산하러 병원 갔는데 병원이 안 받아줘서 병원 앞에서 출산을 했다. 안 받아준 이유는 돈이 없어서였다.

레바논은 겨울에 매우 춥다. 올해 1월에 눈이 1.6미터나 와서 난민캠프 텐트들이 무너지고 며칠 동안 열 명이 얼어 죽었다.

터키 터키에는 공식적으로 난민 신청을 한 난민이 2백만 명인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1백50만 명 정도 있다. 두 달 전부터 외국인 등록증 같은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것만 가져가면 병원 등이 무료다.

그러나 난민들이 너무 많아서 일자리와 집이 부족하다. 터키의 난민캠프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백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2백50만 명은 난민



압둘 와합 씨는 최근 동생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 했지만 한국 정부가 비자를 주지 않아 결국 입국하지 못했다.

캠프 밖에서 산다.

난민캠프 밖의 상황은 캠프보다는 어렵다. 스스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일할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고 힘들게 산다. 그래서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다.

한국에서 '난민들이 터키에서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바다 건너서 유럽 가냐. 차라리 터키에서 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매우 속상하고 답답했다. 맞다. 안전하게는 살고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굶고 살 수 있겠는가?

시리아 내부 시리아 안의 상황은 더 어렵다. 폭격을 받아서 집이 무너지고 마을이 다 무너졌는데도 사람들이 산다. 다른 곳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도 교육을 몇 년 동안 전혀 받지 못했다. 매일 비행기 폭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군] 학교와 병원을 가장 먼저 폭격하고 그 다음에는 일반인 집들과 반군 세력이 있는 곳, 난민 캠프 순서로 폭격한다.

그 이유는 국민들에게 협박하고, 복수하기 위해서다. [반정부] 시위에 나갔으니 너뿐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까지 복수하겠다. 죽기 싫으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대통령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면 폭격도 없고 학교와 병원 등이 있으니깐 편하게 살 수 있다. 정치 성향을 바꾸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반정부군이 싸우다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막는 것이다. "싸우다가 다치면 너는 무조건 죽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또 치료를 못 받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시리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나 다른 나라로 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 지난해 시리아 갔을 때 한국 동화책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아이들한테 읽어 줬는데, 아주 속상한 일을 겪었다. 8~9살 정도 되는 아이 하나가 너무 무관심해 보여 왜 공부를 안 하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공부해서 뭐 해요? 희망이 없고, 나라는 망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앞으로



사진 출처 Ahmad Mhdi, Karam Jarrar

처참하게 파괴된 시리아 서방의 공습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뭐 하게요?" 하고 답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신경 쓰고 도와 주지 않으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상황이다.

시리아 사태 해결 방안은 뭐라고 보는가?

서방과 러시아의 공습은 도움이 안 되고 시리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폭격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미국이 1년 전부터 연합군이라 아이시스 폭격을 시작했는데 아이시스가 더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두 달 전부터 폭격하는데 4퍼센트만 아이시스를 폭격하고 96퍼센트는 반군을 폭격한다. 이것이 무슨 아이시스 폭격인가? 시리아 상황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리아 내전을 더 길어지게 하려고 폭격하는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시리아에서 손을 떼야 한다. 나도 예전에는 유엔, 나토, 오바마, 반기문이 도와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들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게 하니까 차라리 손을 떼면 우리 시리아인들이 알아서 해결하겠다.

한국에 온 시리아 난민들은 어떤 상태고 한국 정부에게 뭘 요구하고 싶은가?

현재 한국에는 시리아인들이 8백48명 정도 있다. 이 중에서 내가 아는 몇 가지는 힘들고 열악하게 살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상황은 다른 나라보다는 낫다.

한국 정부가 대책이 없긴 하지만 본인들이 알아서 산다. 대부분 아예 한국을 모르고 온 분들은 아니고 예전에 자

동차 사업 등으로 왔다간 적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친구도 있고 도와 줄 사람도 있다. 그나마 다행이다.

자세히 한 명씩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긴 하다. 예전에 한 분은 일 허가증이 없어서 불법으로 일하며 돈을 조금만 받았다. 그런데 이것은 시리아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힘이 있고 나라를 대표하기까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시리아 사람들은 시리아 상황이 조금만 안정되면 90퍼센트 이상 다 돌아갈 것이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인도적으로 필요한 것, 일자리, 피난처 등을 제공해 주면 된다.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약품, 음식, 교육 시스템, 난방 등 모든 것이 부족하다.

시리아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로 오해도 많이 받는다. 시리아 안에는 아이시스, 반군 등 여러 세력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리아인을 보면 아이시스나 무슬림 테러리스트라고만 생각한다. 시리아인들은 이 사실에 굉장히 속상해 한다.

그래서 난민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민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평범한 일반인들이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리면 도와 줄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시리아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고, 후원금을 내거나, 미디어를 제작해 시리아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인터뷰·정리 정선영, 임준형, 박이량

기아차 임단투

성과급을 둘러싼 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해 파업을 이어 가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 공세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연말 현대중공업과 현대차 등 주요 대공장 노조가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두 노조의 신입 집행부는 당선 이후 이렇다 할 투쟁을 조직하지 않은 채 '2015년 연내 임단협 타결'을 기조로 협상에 매진했다.

그 결과, 현대중공업 집행부는 사측이 그토록 압박한 기본급 동결을 수용했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8+8 교대제 시행에서 노동강도 강화, 휴일 축소, 추가 연장근무 등의 조건 후퇴를 수반하는 합의를 해 그 의미를 퇴색시켰고, 통상임금 문제는 또다시 뒤로 미뤘다.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막기는 했지만, 2016년 임협에서 논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반대표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두 노조 모두에서 조합원 40퍼센트가량이 이제 막 들어선 집행부의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현대차지부 합의의 또 다른 문제점은 특별호봉승급분 약 2만 5천 원과 주식 20주(3백만 원 상당)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사측은 그동안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기본급 인상분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성과급은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번



이간질 사측은 분열을 조장해 노동자들의 힘을 약화시키려 한다. 기아차 화성지회 임투 집회.

에는 성과급의 일부를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가뜰이나 큰 임금 차별을 더 심하게 받게 됐다.

그리고 지금 기아차 사측은 현대차지부의 안을 기아차에도 적용하려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사측은 한술 더 떠 '기아차 정규직의

임금이 현대차보다 4.1퍼센트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그만큼 임금 인상을 적게 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이에 맞서 기아차지부는 현대차와의 차별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에 대한 성과급 차별을 용납할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4일까지 2~4시간 파업을 진행했다. 주요 사업장들이 투쟁을 회파하고 실망스런 합의를 한 상황에서, 임금 인상과 더불어 비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를 함께 내걸고 파업하는

기아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정규직 조합원들은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임금 차별을 받는 데 함께 분노하고 있다.

이런 투쟁 끝에 사측은 5일 정규직의 임금을 현대차 수준으로 맞춰 주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철회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부는 투쟁을 더한층 발전시켜 차등 임금 정책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사측에 강력히 맞서야 한다.

김성락 집행부가 최근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양보론'은 이런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부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쟁대위 소식지에 실린 성명을 통해 "정규직 조합원의 몫을 나누어서라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동참을 제안합니다" 하고 말했다. 집행부는 교섭단 회의에서 '정규직 수당 인상분의 일부를 떼어 내 비정규직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하자'는 주장을 했다가, 대의원 교섭단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사측이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정규직의 80퍼센트 수준으로나마 지급하던 성과급을 줄이려고 주식 지급이라는 꾀수를 사용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규직 조합원의 몫을 나눌" 게 아니라 사측의 꾀수를 폐기시켜야 한다. 원래대로 성과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이 대안이다.

대의원 교섭단과 현장조합원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집행부는 최근 슬며시 양보론을 거둬들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나눔과 연대'라는 모호한 표현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집행부가 임단협의 핵심 쟁점 사안인 8+8 주간2교대제 완성, 통상임금 쟁취 등에 대해서는 거의 말을 아끼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서울 시청 앞 광고탑에서 비정규직 동지 두 명이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데,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문제도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집행부는 이런 핵심 쟁점 모두를 임투 이후로 넘기려는 듯하다.

그러나 전임 집행부도 2014년 임협 합의 때 이 세 쟁점을 이듬해로 미루다가 아무런 성과도 없이 허송세월했다. 임협이 타결되고 나면 쟁의권이 없어 사측이 약속을 번복해도 손쓸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쟁의권이 있는 지금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 개악법이 통과되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임단협의 핵심 요구들을 올곧게 관철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더 미루지 말고 단호하게 파업을 이어 가야 한다.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금속노조 대의원

서평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신자유주의·주류 경제학에 대한 통렬한 비판

미국의 급진적 경제학자인 E. K. 헌트가 마크 라우첸하이저와 함께 저술한 《경제사상사》 제3판이 얼마 전에 번역 출판됐다. 이 책은 분량(1,112쪽)과 가격(6만 5천 원) 모두에서 부담을 느낄 만도 하지만 그럼에도 꼭 읽어 볼 만한 훌륭한 책이다.

사실 이 책의 제1판(E. K. 헌트가 혼자 쓴)이 김성구·김양화가 번역해 1983년에 출판된 적이 있지만 전두환 정권의 탄압 때문에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출판됐다. 더욱이 지금은 절판돼 구하기도 힘들다. 이번 3판은 이전에 누락된 것을 모두 복원했다. 또 홍기빈 씨가 번역한 이번 판본이 이전 번역본에 비해 훨씬 잘 읽힌다는 장점도 있다.

E. K. 헌트는 《경제사상사》 외에도 《자본주의에 불만 있는 이들을 위한 경제사 강의》(이매진), 《소유의 위기》(종원문화) 등을 저술한 저명한 좌파 경제학자다. 헌트의 《경제사상사》는 아담 스미스부터 최근의 주류 경제 이론까지 2백50여 년의 경제학설을 핵심적으로 잘 요약해 놓았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함께 읽으면 좋을 책으로는 갈브레이스가 쓴 《경제학의 역사》(책벌레)가 있고, 자본주의 체제

의 형성과정에서 경제 사상과 특히 노동가치론이 어떻게 확립됐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고전인 아이작 일리치 루빈의 《경제사상사》(신지평)이 있다. 이 책은 아쉽게도 절판됐다.

E. K. 헌트가 쓴 책의 유용성은 신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의 지류들을 잘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핵심 내용을 근본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 이후 '신고전파종합'이 다시 리버럴 신고전파 경제학과 보수적 신고전파 경제학으로 양분되

는 과정과 이들 사이의 차이를 필자들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신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이라면 모두가 갖고 있는 근본적 모순을 잘 설명한다. 예를 들어 신고전파 이데올로기의 핵심인 한계생산성 이론에 따르면, 자본의 가격은 자본의 수익성으로 결정되며, 자본의 수익성은 다시 앞으로 낼을 소득인 자본의 생산성에 좌우된다. 그런데 자본생산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리 자본의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 결국 자본이란 자본 생산성에 의해 결정되지만 자본 생산성은 또다시 자본의 가격에 의존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들은 피에르 스라파가 "신고전파 경제학에 구멍되어 있는 효용 개념에 바탕한 공리주의 경제학의 지적 전통 체계 전체를 논리적, 이론적으로 완전히 초토화"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한지는 C. E. 퍼거슨 교수의 말로 잘 드러나고 있는데, 그는 "신고전파 경제 이론에 의지할지 말지는 신앙의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역자 홍기빈 씨는 '윤길이의

말'에서 자본 개념이 무너지면서 주류 경제학의 체계가 근본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피할 도리가 없게 됐지만 이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신기(神技)를 부리고 있는데, 바로 침묵과 무시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저자들이 주류 경제학의 한계에서 벗어날 방안으로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자본주의 분석과 자본 개념을 소개하거나 연결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은 아쉽다.

약점

이런 약점은 3판의 변화된 내용에서도 반영돼 있는 듯하다. 저자들은 3판에서는 발라의 일반균형이론의 기술적 세부 사항(10장 부록), 해러드와 도마의 성장모델에 대한 설명(15장 부록), 솔로 모델(16장 부록)을 더 추가했는데, 그 내용들이 너무 학술적이다. 또 마지막 세 장을 업데이트하면서 제도주의, 포스트케인스주의 등 이른바 비주류 경제학의 흐름들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개돼 있지 않다.

홍기빈 씨는 E. K. 헌트가 마르크스

주의 경제학을 자신의 중심적 입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럽 측 제도주의 흐름을 누락시킨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는 그 반대다. 저자들은 1990년대 이래로 전개된 신경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닷컴 거품의 붕괴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분석한 성과들에 대해서는 주류와 여타 비주류 경제학의 최근 흐름만큼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방대한 경제학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의 주요 내용과 그 모순들(자본 개념, 한계생산성 분배 이론의 문제, 신고전파 성장 이론의 문제 등)을 훌륭하게 비판하고 있다. 3판의 서문을 쓴 로빈 나일은 자신의 젊은 시절, E. K. 헌트의 논문 한 편이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놨다고 회고했다. 마찬가지로 이 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신자유주의 주류 경제학도 나름 쓸모가 있다는 환상을 제거하는 데 훌륭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정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소속 연구원



《E. K. 헌트의 경제사상사》
E. K. 헌트, 마크 라우첸하이저, 시대의창, 1,112쪽, 65,000원.



통상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청년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지침



12월 30일 고용노동부가 '직무능력
과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통상
해고 지침) 초안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취업규칙 변경 지침) 개정안
을 발표했다. 정부는 어떻게 선정됐는
지 알 수 없는 '전문가'들을 모아 놓고,
형식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
만 쌓으려 했다.

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법과 판례에 입
각한 지침인 만큼 ... 임금을 깎거나 쉬운
해고 등이라며 폄하하는 것은 판례와 법
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변했다.

실제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온갖 법
원 판례들을 늘어놓고 있다. 그러나 정
부 지침들이 단지 법원 판례들을 모아
둔 것이라면 정부가 애써 지침을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진실은, 정부가
법원 판례들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하고 이어 붙여, 기업들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지
침을 만들어 뱐다는 것이다.

경총 등 기업주들은 정부의 지침 발
표를 환영하면서도 법제화가 필요하
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오히려 정부 지
침이 기존 법률과 법원 판례와 충돌한
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아전인수

정부 지침은 해고를 통상해고(일반
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경영상 해
고)로 구분하면서, '업무부적응자'나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통상해고의 사
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노



기업주들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동자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
도록 하고, 저성과자에 대해 교육훈련
이나 배치 전환 등의 기회를 주도록 엄
격하게 규정하기 때문에, 통상해고 지
침이 "부당해고 사례가 획기적으로 줄
여들 수 있게 하는 해고에 대한 안전장
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침으로 통상해고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반하는 것
이자, 새로운 해고 방식을 하나 더 만
들어 주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그 어떤 법률에서도 통상해고
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횡령 등 개인
적인 비리나 심각한 법규 위반을 저질
렀을 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징계해고
와, 기업의 사정이 크게 악화됐을 때 가
능한 정리해고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

을 뿐이다.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사례'
로 여러 판례를 들고 있지만, 이는 모두
근로기준법 상의 징계해고 사례다.

성과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노동자들은 대부분 협
력하며 일하기 때문에 객관적 수치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대부분이다. 영업 실적처럼 객관적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과도 사실은 사측이 어떤 업무를 부
여하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교육훈련이나 배치전환의 기회를 받
드시 줘야 한다는 규정도 오히려 사측
이 퇴직을 거부하는 노동자를 괴롭히
는 수단이 될 공산이 크다. 최근 두산
인프라코어의 대규모 '희망퇴직' 사태
에서 보듯, 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을

교육훈련이라
는 명분으로 대기
발령하고 매일 '회고록'을 작성하도록
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괴롭혀 결국 나
가게 만드는 일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처럼 정부의 통상해고 지침은 '정
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는다는 노
동법의 대원칙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자, 이미 '희망퇴직',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해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어느 때나 할 수 있게 만들
어 주는 '쉬운 해고' 방안이다. 여러 제
한 조건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
업들은 이미 이런 조건들을 피하는 방
법을 개발해 왔다.

회고록

취업규칙 변경 지침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
면 노동자 다수의 동의 없이도 임금이
나 노동조건을 삭감하는 취업규칙 변
경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러나 우리 나라 근로기준법은 취업규
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통념상 합리
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사례조차 몇 안
되는 예외적 사례들일 뿐인데, 이를 근
거로 근로기준법 자체를 뒤엎는 지침
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 지침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가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
지 않고, 취업규칙 변경에 반대하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사측이 마음
대로 변경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동
자들이 '대안적인' 임금 삭감 방안을 제
시하지 않으면 사측이 마음대로 취업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침 초안 발표
에 이어, 1월 중에 지침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절차마저 무시
하고 "행정 독재"로 통상해고와 취업규
칙 변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만큼 한
국 지배자들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세계경제 위기에 따라 산
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
자, 기업주들에게 쉬운 해고와 임금 삭
감의 방안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 것이다.

이번 지침을 두고 "지침은 노동부 내
노동행정 집행을 위한 규정일 뿐 대외
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
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정
부 매뉴얼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통
상임금, 근로시간 규정이 법률보다 우
선한 역사가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지
침이 결국 법률 개악(통상임금 축소,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0시간
으로 연장)의 근거가 됐다는 점도 기억
해야 한다.

정부 지침 발표 전에 투쟁을 발전시
켜 이를 저지해야 한다. 그래야 오히
려 벌어질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을 건설
하는 데도 더 유리할 것이다.

강동훈

정부, 무상보육 예산 0원 편성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 회피 때문에 당
장 이달 20일부터 보육 대란이 벌어지
게 생겼다.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재정 부담을(2조 1천억 원) 시도교육
청에 떠넘겼지만, 교육청은 그만한 돈
도 없을 뿐더러 정부의 책임 떠넘기
기를 반대하며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시·도 의회에서는 유
치원 예산만 통과시키는 것도 형평성
에 맞지 않라며 부결시켰다. 그 결과
어린이집·유치원 모두 보육 '대란'을
겪을 판이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지
원이 끊기면 부모들은 매달 수십만 원
씩 보육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정부는 교육감들이 "법적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정
부가 말하는 '법적 의무'는 지난해 5월
국회도 거치지 않고 정부 자신이 뜯어
고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한 것일

뿐이다. 정작 상위 법률에 따르면 어
린이집은 복지 시설로 분류돼 중앙 정부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도록 돼 있다.

몇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해
온 무상보육 정책은 2012년 총선과 대
선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시행됐다. 전
서울시장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 몽
니를 부리다 물러난 사건은 새누리당
조차 복지 확대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 부담은 자본가들이 아니
라 노동자들이 져야 했다. 박근혜가 무
상보육을 비롯해 엄청나게 많은 복지
공약을 내놓고도 끝까지 '증세는 없다'
고 버틴 까닭이다.

이런 고된 끝에 당시 이명박 정부
와 새누리당은 2012년 1월에 열린 '제
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용을 교
육청에 떠넘기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데
(2014년 기준 68퍼센트) 이 중에 일부
를 무상보육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것
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한편 교육
청이 다른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려 한 것이다. '형 급식 뺏어서
동생 보육비 주라는 말이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또, 지난해 9월 발표 '2016~2020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시도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교육
재정 부담에 대한 사전협의할 하도록
돼 있다. 협의 대상에는 보육비도 포
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뿐 아니
라 지자체에도 보육비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지자체는 교육청 예산의 일부
(2014년 현재 약 17퍼센트)를 부담하

고 집행(보육비 지급)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이런 조처는 정부가 복지 확대를 가
로막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일부 진보 교육감들과 지자체장들이
복지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효과를 낸다. 교육부 차관 이영은 "학
부모를 볼모로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
는" 교육청을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애당초 책임을 떠
넘긴 것은 정부다.

또, 이런 떠넘기기는 한정된 재정 내
에서 여러 복지 정책들을 경합시킴으
로써 복지 확대 열망을 억누르는 효과
를 내기도 쉽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렸거나
목적예비비를 3천억 원 지원했다거나
하는 정부의 주장은 죄다 헛소리다. 당
장 초중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 여건

을 개선하는 데에도 부족한 돈이기 때
문이다. 지방채 발행은 빚의 구렁텅이
에 빠진 채무자처럼 교육청의 복지 확
대 여지를 더욱 옥죄 뿐이다. 정부는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할 뿐 그 이자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4일 발표
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와 사회보험료 인상 등 복지
지출 억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
육 대란은 이런 정책이 낳을 결과의 일
부다. 정부는 사실상 무상보육 예산 떠
넘기기를 통해 교육 재정을 삭감하도
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해처럼 정부
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 그럴수록
박근혜만 더욱 기세등등해질 뿐이다.
무상보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장호중